



4면

'지역 청년문제 맡겨라'
사회혁신 전주 개소식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음 9월 24일) 제2653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직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자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전북도,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1단계 방역조치 조정
단계 격상기준 높이고
3단계→5단계 세분화
식당·카페 점검 강화

전북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지난 10월 12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 체계로 2월 대구·경북, 5월 이태원 클럽, 8월 광복절 집회로 인한 전국적인 확산 유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했으나, 코로나19 초기 치료대응 체계로 설정된 단계별 격상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단계별 방역조치의 강도 차이가 커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현재 중증환자 추가 병상확보로 강화된 의료체계를 감안해 단계별 격상기준을 높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1단계에서부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방역수칙의 의무화 확대로 실현상을 높였으며, 2단계 이상에서는 운영중단 조치 최소화로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보장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노후남관(광주·전남·전북) 일일 국내외 환자 30명 미만일 때까지 유지되며, 그 이상이 되면 중앙인전대백분부와 협의를 통해 1.5단계 격상을 결정한다.

2단계는 1.5단계 조치 1주 후에도 2배 이상으로 증가 2개 이상 지역에서

1.5단계가 1주 이상 지속될 때 격상을 검토한다.

전국 유행수준인 2.5단계는 전국 일일 확진자수가 400~500명 이상이나 환자 2배 증가, 3단계는 800~1,000명 이상이거나 환자 2배 증가가 발생할 때 격상을 검토한다.

전북도의 이번 개편내용이 반영된 1단계 조정이 기존 1단계 방역조치와 다른 부분은 150m 이상 식당과 카페(일



지난 6일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사진 왼쪽)이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지난 10월 12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빈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수칙뿐 아니라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된다.

또한, 모든 모임과 행사는 이전과 같이 허용하지만, 500명 이상 행사는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시군에 신고·협의를 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 된다.

아울러, 종교시설도 정규예배 허용, 모임·식사 자체 권고 등 이전 조치와

같지만 속박행사는 금지된다.

더불어 국·공공시설은 기준에 허용 인원 최대 50% 제한을 두었는데, 이번 조정으로 시설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하에 전면 운영이 가능하다.

전북도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단계 조정에 따라 다음 세 가지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그동안 방역이 취약했지만 중점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둘째,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서 도민들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과목별 인력풀 운영 방법의 차이에 따른 과목 간 협평성을 고려, 자질과 소양 검증 중심의 학교장 추천제

2차 업소별 집합금지 조치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 10여 개소를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유호상기자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북도, 어기면 과태료… 고위험시설 등 집중점검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2인 이상이 있는 모든 실내와 김연 위험이 있는 집회·공연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계도 차원의 집중적인 점검활동을 실시한다.

도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10일동안 밀집도가 높은 고위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폐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밀집도 및 유행 양상 등을 고려해 종점관리시설(9종) 등 집단김연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을 우선 점검한다.

종점관리시설(9종)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호주점, 단란주점, 김성주점, 롤리테,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등이다.

종점관리시설 등 고위험시설은 담당부서에서 세부 점검계획을 세워 시군과 함께 실질적이고 신속한 점검이 진행될 계획이다.

점검시작은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가인데, 점검 당시 마스크 미착용자를 바로 적발하지 않고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계도한 후, 그 이후에도 마스크

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다면, 음식점, 의료행위, 공연 등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은 과태료 부과 예외로 운영 방침이다.

도는 이번 집중점검기간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빠른 기간 안에 마스크 착용을 정착시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 홍보와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해 방역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정부가 앞으로 김연자 발생 초기이나 마스크 착용 정도 등 위험도 평가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는 행정명령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백신이 없는 현재로선 마스크 착용이 유일한 백신이고, 최고의 방역 대책이다"며 "도민들에게 생활방역의 기본으로 마스크 착용에 한 명도 빠짐없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기간제교원 인력풀 학교장 추천제로 단일화

전북교육청, 시험 폐지… 자질·소양 검증 필요성 확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기간제교원 인력풀 운영 방식을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도교육청이 공개한 '2021년 기간제교원 기본 계획'에 따르면 인력풀 공개전형(시험제) 6과목에 대해 시험을 폐지하고 기존 인력풀 학교장 추천제 전형을 기존 13과목에서 19과목으로 확대된다.

기준 일반사회, 역사·지리,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음악·미술, 기술·직업·초등교육, 보건·전문상담에 국어·영어·수학·체육·특수(초등), 특수(중등)가 추가된다.

학교장 추천제 평가는 ▲교육자로서의 품성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학습지도 ▲생활지도 ▲직원간의 화합 등 5개 영역을 평가하고,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인력풀 등록 대상자로 추천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장 추천제 인력풀 등재를 희망하는 기간제교원은 평가신청서, 평가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학교는 학교 인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평가서와 학교장 추천서를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인력풀 등재는 평가 신청 시 본인이

직접 교육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코너에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인력풀 등재 승인 유효기간은 학교장 추천일을 기준으로 4년이다.

기존 인력풀 등재된 경우는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본인의 인력풀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장 추천제를 비롯해 임용대기자, 공립 1차 시험 이상 합격자 등 4가지 인력풀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